



국민 중심 교통의 미래를 설계하다 대한교통학회 토론회 후기

교통, 삶의 기본권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 인프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통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산업 경쟁력,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 시대'를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교통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이에 대한교통학회는 새로운 정부의 교통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정과제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2025년 5월 8일과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두 토론회에서는 '교통 기본권' 보장,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통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 '실천 가능한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모았다.

본 기고문은 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과 방향에 대한 내용과 토론회의 내용을 통해 바탕으로 향후 교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TS Korea
사업지원본부 사업관리실
김 종 보 부장

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 공약 개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교통정책을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복지·균형발전·산업 전략이 결합된 복합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왔다. 정부의 철학은 '사람 중심', '디지털 기반',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위에서, 다음의 네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와 교통약자 우선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둘째, 자율주행·AI 기반 교통운영, ITS, 스마트 모빌리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혁신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교통격차 해소 및 인프라 투자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넷째,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친환경 교통체계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장치가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향후 교통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사람과 기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설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목록

연번	구분	주요 내용
1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2	[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3	[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4	[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5	[사법·행정·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	[행정·경제·산업]	세종 행정수도과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7	[교육·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9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0	[환경·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새정부에 바란다: 교통분야 쟁점과 대안’ 토론회

2025년 5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 대한교통학회는 "새정부에 바란다: 교통분야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교통 현안을 들여다보고, 다음과 같은 4대 목표와 11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부원장은 미국 사례(ISTEA~IIJA 등)를 인용하며 교통기본법 제정과 대통령직속 위원회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고, 중앙일보 강갑생 국장은 도심 지하화, 공항 건설 등의 상충 요소와 정치 결정 문제를 지적하였다,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는 기술-정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복기왕, 염태영, 정준호 의원은 교통의 공공성 강화, 지방 격차 해소, 지속가능 교통복지를 언급하며 학회의 제안이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부에 바란다: 교통분야 쟁점과 대안



일시 2025년 5월 8일(목) 14:00 ~ 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염태영, 윤종균, 이견태, 이연희, 정준호 국회의원
주관 대한교통학회

프로그램

• 사회: 김용진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인하대학교 교수)

• 국민의례

• 개회식

환영사: 대한교통학회 유정훈 회장
 축사: 국회의원

• 기념촬영

• 발표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토론

회장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질의응답

- 등록비: 없음 (자료집 제공, 1시30분부터 등록)
- 문 의: 대한교통학회 사무국 02-564-9201~2 / kst@kst.or.kr
- 사전참가등록: 온라인신청 <https://bit.ly/3u3lPH7>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염태영, 윤종균, 이견태, 이연희, 정준호 국회의원

4대 목표, 11개 추진과제

4대 목표	11개 추진과제
1. 시와 모빌리티로 더 가까운 일상, 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 3060 생활권 구축으로 더 가까워진 일상
	· 시와 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2. 꼼꼼한 교통행정서비스와 체계 개편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 교통관련 행정체계 개편으로 교통안전, 복지 정책 강화
	· 어린이, 고령자 교통사망 사고 제로를 위한 모든 국가교통역량과 투자 집중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관리 및 골든타임 확보 기반 구축
3.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모빌리티 서비스 보장	· 헌법적 가치로 보장받는 국민의 이동권 확보
	· 국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필수 교통서비스 보장
	· 학생, 고령자, 어린이 및 여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대와 계층공감 이동권 확보 제도 도입
	· 전국민 교통비 차별과 부담없는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민교통보험 제도' 도입
4. 국가 경쟁력과 국민생활을 지원하는 물류시스템 구축	·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 물류시스템과 신물류망 구축
	·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대한교통학회 유정훈 회장 등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교통모빌리티 정책과 방향’ 토론회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대한교통학회와 교통모빌리티정책특보단이 공동 주관한 정책 실행 중심의 심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교통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 확보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정책을 설계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강조하며, 실행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인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존 인프라 위주의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통모빌리티정책특보단의 이용주 박사는 이재명 정부의 교통공약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기술 기반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기 성과에 갇히지 않는 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은 발언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법 내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춘 안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제도와 인프라는 여전히 정체돼 있다”며 법·제도 정비의 시의성을 언급했다.

중앙일보 강갑생 국장은 언론의 시각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평가하며,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공약 선별과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책의 전체 방향성을 명확히 정리한 뒤, 이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교통기본법과 도시계획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IT 기반의 교통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정책 실현의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며, 공공·민간 간 기술 협력과 플랫폼 연계 활성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대한교통학회 유정훈 회장이 교통모빌리티 정책과 방향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명예회장이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 방향 및 제언

민간·현장 전문가와 산업계의 목소리

자율주행업체에서는 “한국은 피지컬 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며,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중심 자율주행은 복지 교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엔지니어링 분야는 “공공부문 축소 속에서 민간 참여 확대와 예산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S 분야에서는 ITS 예산 축소로 지자체가 추진하던 서비스가 중단 위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ITS 산업이 정부 정책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민간 중심에서 출발한 ITS 기술이 이제는 공공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전략적 매칭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ITS, 정책 수용 가능성 시사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김영환 국회의원은 ITS 산업을 대표적인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으로 지목하며, 정부 정책 기초와의 정합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조직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큰 예산 없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세부 정책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ITS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매칭만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분야”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오늘처럼 큰 방향만 담긴 자료는 국정기획위원회 같은 실무 부처에서 제대로 읽히기 어렵다”며, 전달 방식과 내용 구성이 전략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책 제언을 넘어 실천으로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는 교통정책의 방향이 선언적 담론에서 실제 이행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정부의 철학, 학계의 이론, 산업계의 경험이 결합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사람 중심’, ‘디지털 기반’,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가 정책과 예산, 제도에 실제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교통기본법 제정과 함께 정책 거버넌스 체계가 재편되어야 한다. ②AI 기반 교통운영 기술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③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교통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④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⑤ITS·스마트신호·자율주행 등 디지털 교통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실천과 감시, 그리고 지속적 제언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역이 살아나며, 산업이 도약하는 교통정책. 그 전환의 시간은 지금이다.